

화정 아이파크 부분 철거에 입주자들 '분통'

입주예정자 "전면 철거 약속 안 지켜"... 현산 "지난해 설명회서 '주거동 철거' 설명" 1~3층 상가 남겨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있었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를 앞두고 '철거 범위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전면 해체'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상은 주상복합 상가인 1~3층은 남긴 채 철거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또 1단지에 한 곳, 2단지에 두 곳 설치돼 있는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주인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철거 계획조차 논의하지 않는 등 애초부터 철거 범위를 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13일 화정아이파크 철거현장에서 입주예정자 60여명과 함께 '해체계획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철거 공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철거 계획을 설명하려는 자리였으나, 입주예정자들이 "전면 철거라고 해 놓고 왜 1~3층 상가층은 철거하지 않느냐"고 반발하면서 고성어 오간 끝에 4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부터 이미 상가층을 제외할 방침이었다. 지하 공간과 3개 동으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 또한 철거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해 10월 18일 입주예정자를 모아 진행한 '수분양자 보상 종합대책' 설명회에서 "주거층을 철거하겠다"는 설명을 했으며, 이에 별다른 이견 없이 설명회가 마무리 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30일 서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 초안 또한 상가층을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 채 제출됐으며, 서구청은 별다른 의심 없이 올해 3월 해체계획서를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예정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설명회에서 철거 범위에 대해 설명을 했거나 동의 받았더라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 측이 침수를 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철거 범위를 주거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난해 5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아이파크를 새로 짓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며 "철거 범위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사실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호명기 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장은 "입주예정자들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가층을 철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입주민 의견을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철거 범위 변경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14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해체 일정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HDC현대산업개발이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해체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광주 서구청 '부분 철거' 알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지... 입주예정자들과 논의 없어

광주시 서구청이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해체계획서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부분 철거' 계획을 인지했으나, 입주예정자들과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체계획서 전반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구청이 철거 범위에 중대한 차이가 생겼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측 설명만 듣고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확인조차 안 하는 등 안이한 행정을 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구청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측은 해체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서구청을 방문해 "상가층을 제외하고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측은 "주거층만 철거하는 안에 입주예정자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하자, 서구청은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이후 서구청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자대표협의회는 물론 어떤 입주예정자와도 철거 범위와 관련된 논의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입주예정자들에게 상가층을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주거층을 철거하겠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한 설명만 하는 데 그쳤으며, 철거 범위를 합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은 "현대산업개발 말만 듣고, 당연히 입주민들이 알 거라 믿고 교차 검증하지 않은 점은 실수했다"며 "지난해 10월에 주민들과 보상 관련 종합대책 회의를 할 때 철거범위가 논의됐는데, 당시 서구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재시공을 포함한 전체 사업 기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아닌 한, 해체계획의 변동 사실을 알았더라도 행정정이 주민들에게 별도로 계획 변동 사실을 알릴 의무나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일 오염수 방류 허용 윤 정부 강력 규탄"

환경단체 "대안 찾기 요구해야"

광주·전남 2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오는 22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집총행동의 날을 진행하고 다음달 12일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위를 막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

학교 찾아가는 예술체험

전남교육청 12월까지 운영

전남지역 학생들의 예술감성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의 예술단체와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체험'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립국악단은 움직이는 가무악회 '작지손 국악'을 25개교를 대상으로 선보인다. 작품은 지난 2021년 시작됐으며 남도민요, 국악동요와 입춤소고, 부채춤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약의 연대기' 사물공연, '신비랍 메타리' 기악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종료 후 학생들은 예술인들로부터 민요, 비나리놀이, 강강술래, 즉방울 놀이 등 전통 연희를 배울 수 있다.

회화·공예·문인화 등 지역 작가의 작품 10~2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움직이는 미술관 '함께하는 미술다'도 20개교에서 펼쳐진다.

고교 10개교에서는 학생과 지역 예술인들이 협업해 '아름다운 학교 벽화 그리기'가 진행된다.

정선영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 작품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국가유산 장마에 '수난'

선암사 무어전·나주 우남고택 담장 붕괴 등 3곳 피해

순천 선암사 무어전 담장이 붕괴되고, 해천동 기와가 빠지는 등 올해 장맛비로 광주·전남 국가유산 3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올해 여름 장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12일 기준 전국에서 10건(사적 3건, 국가민속문화재 2건, 천연기념물 3건, 명승 1건, 국가등록문화재 1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10건 중 광주·전남지역 국가유산은 총 3건이 포함됐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한 전남, 강원, 경북 등지에서 수목 쓰러짐, 담장 및 석축 붕괴 등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청은 2차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 중이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복구에 나섰

다. 주요 부분의 피해가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 등 국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순천 선암사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무어전 담장이 무너지고 해천동의 기와가 탈락했다. 이에 피해 발생지역 접근이 차단됐다.

또 나주 우남고택의 험문 담장이 무너져 잔해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북구 환벽당 일대의 소나무 2그루가 넘어져 제거됐고 주변의 다른 소나무에 대해서는 긴급 가지치기를 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로부터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위험물 제거, 우장막과 안전선 설치 등 피해확산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

광주노동청,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안한다

권익보호협의회 '구제' 결정

고의나 중과실 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넘겼던 이주노동자들이(6월 28일자 광주일보 7면) 강제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 위기에 놓였던 이주노동자 2명에 대해 추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청은 지난 11일 오후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권익보호협의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찬반투표 대상은 지난달 27일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제기를 한 캄보디아 이

주노동자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2명이다.

이들은 광주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려 했지만 법적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3개월 이내 취업해야 하고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경우 3개월 내 취업을 했음에도 노동청에서 서류 처리 절차가 미뤄짐에 따라 강제 추방 명령을 받게 됐고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사업자 변경 신청 신고 기간을 넘겨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상90만원)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